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0. 13.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21호
----------	-------

제출연월일 : 2020. 10.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 위촉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 참여 상한 비율 설정(안 제7조)
- 나. 과제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을 심의에서 배제(안 제13조)
- 다. 연구용역결과 공개를 통한 연구용역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년 9월 3일 ~ 9월 23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041-635-2110)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 :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 당연직 위원 :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7조2(연구결과 공개) ① 시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참여예산실장	홍	민 기
	예 산 팀 장	김	명 환
	담 당 자	백 인 나 (746-507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당연직 위원 :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u></p> <p>2.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1. <u>당연직 위원 :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u></p> <p>2.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p>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의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u></p> <p>2. <u>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u></p> <p>3. <u>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u></p>

현행	개정안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7조의2(연구결과 공개) ① 시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p>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참여예산실장 홍 민 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 국민권익위원회-3295호(2020.8.19.)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 공문_中 발췌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기관
①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인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②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 -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③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